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5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21일 (음력 12월 16일) 월요일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파장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솔렁이고 있다. 사진은 손 의원 가족·측근이 건물을 사들인 19일 오후 목포시 대의동 일대 모습.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구을)의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전남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오랜 침체기에 빠진 '불 꺼진 목포 원도심'이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으로 새로 운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원도심 만호동과

유달동·서산동 일대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2건과 문화재청의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등 3건이 추진되고 있다.

만호동과 서산동 일대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897 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보리미당' 등 2건이다.

2022년까지 316억원이 투입되는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은 1897년 목포개항 이후

보존된 근대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 당시 모습을 재현한 개항의 거리, 청년 어울림마당과 역사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산동 보리미당 도시재생사업'은 항구 기능과 연계해 허름한 주택과 골목길을 단장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거지 지원형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224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1년까지 진행된다.

또 근대건축물이 밀집된 유달·만호동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국가 등록문화재 빌그룹과 활용, 경관정비 등이 실시된다. 이를 사업은 목포시가 일제강점기 3대항

깜깜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안했던 도시가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번 여파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고 위축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환 목포대 교수는 "근대문화를 활용한 목포의 명소화 사업의 부작용으로, 지역 민들의 피해로 연결돼선 안된다"고 말했으며, 주민 장도 씨는 "논란은 빨리 매듭짓고, 문화재 가치를 살린 구도심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의 정치권도 정쟁화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목포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평화당 박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광주시 활성화계획 마련 2월 국토부 제출
주거·상업·유통 복합시설…광주 랜드마크

광주시는 20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상업·유통 등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광주역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역 경제기반형 뉴딜

6대도시의 명성을 되찾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지역민들은 기대를 모고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의 투기 의혹 파문이 이를 사업으로 불똥이 튀거나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정보 취득과 악용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기 보다는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송영종 목포경찰련 공동대표는 "밤이면

원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목포 구도심 재생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목포시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에 목포를 끌어 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이 길을 잊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성환 기자

실무협의를 거쳐 사용부지 범위, 미사용 철로 조정,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개발구상 용역 추진 등 구체적인 내용 등을 협의중이다.

또 지난해 12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2월 초 국토부에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3월에는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아 6월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별 설계와 보상, 공사착공 등을 추진한다.

문법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한 광주역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은홍 기자



오십보 백보

자유한국당이 5·18전성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한 이후 광주에서 분노가 카고 있다.

5·18 이후 행정자치부는 옛 전남도청 앞에 모인 광주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들은 자민원과 다툴바 없다"며 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5·18 당시 광주·민주연세협의회 등 광주 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5·18전성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차장, 이동우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krp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농지연금사업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농지지원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증도인출 가능)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농지지원

- 청년창업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똑똑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문의 전화

1577-7770